월요광장

터키판 이한열, 그리고 한국산 최루탄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

터키에서 15살 소년이 죽었다.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집 근처에서 빵을 사러가던 소년 엘반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269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사투를 벌이던 엘반은 지난 3월 12일 그만 죽고 말았다. 엘반의 죽음으로 터키 민주화 시위는 더욱 불이 붙었고, 한국의 언론들은 '터키판 이한열'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그 최루탄의 생산지였다. 엘반의 머리를 때린 최루탄은 DK-N500 모델로, 'CNO TECH(테크)'라는 상표가 붙어 있었다. 경북 문경에 있는 대광화공이 제조하여 터키에 수출한 것이다.

한국산 최루탄이 중동지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국은 터키에 40만 발을, 인구 120만 명에 불과한 바레인엔 15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을 수출했다. 바레인정부는 한국산 최루탄을 사용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민을 탄압했다. 39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고 한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금남로, 충장로 거리를 뿌옇게 뒤덮었던 최루탄이 터키, 바레인에서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는 무기로 'MADE IN KOREA'의 '우수한 성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2012년 4월 '최루가스 사용은 고문'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터키 경찰이 2004년 시위에 참가한 이들의 얼굴에 대고 최루가스를 발사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었는데, 재판소는 터키 정부가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 및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1만 1500유로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요컨대 최루가스의 사용이 고문의 일종이라는 의미다.

유럽 인권재판소에 따르면 최루가스는 호흡기 곤란, 구역질, 가슴통증, 알러지 등 인체에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여 강력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열린 공간의 경우도 예외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최루탄을 사용하는 공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최루가스에 노출된 사람은 바로 의사의 응급조치와 최루가스 해독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에서는 최루탄 'CS가스'를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다. 수출할 때는 방위사업청 승인이 필요하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뜻이다. 최루가스는 일종의 화학무기다. 군중 통제의 방법으로 합리화되어 왔으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시위해산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쏘아대는 최루탄은 사실상의 살상무기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최루탄은 언제나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 눈에 최루탄이 박힌 끔직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정읍 출신 마산상고 김주열군이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화순 출신 연세대생 이한열은 6월 항쟁의 상징이 되었다.

AP 선정 20세기 100대 사진에 포함된,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사진은 "최루탄을 쏘지 마라"고 외치며 웃옷을 벗은 한 시민이 다탄두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찰에게 달려가는 모습이었다. 민주주의를 피워낸 촉매제가 되었던 최루탄은 민주정부에 의해 사용이 자제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시 등장했고 이제는 외국까지 수출돼서 사용되고 있다. 최루가스 재등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위기, 그 역사와 함께 하는 상징인 것이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에 쓰이는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기거래조약 7조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무기 수출을 금하고 있다. 바레인과 터키처럼 인명을 살상한 데 사용된 최루가스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산 최루탄이 계속 사용되면 국제적으로 '한국은 폭력진압 장비를 수출하는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제 NGO '바레인워치' 빌 마크작은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묻는다면 현대차나 삼성핸드폰의 성능, 강남스타일을 이야기하겠지만, 바레인에서 같은 질문을 한다면 한국산 최루탄 더미나 한국산 최루탄에 맞아 다친 사람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이는 터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루탄이 없는 세상, 그것은 또다른 한열이와 엘반이 나오지 않는 세계일 것이다. 최루탄을 수출하지 않는 세상, 그것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많이 보장된 사회일 것이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깨어있는 시민'의 몫이다.

법조칼럼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단상

김동욱
광주지법 판사

저는 작년부터 개인파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신청이란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있으나, 갚을 수 없으니,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 법학공부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A가 B에게 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줄 돈이 있는데 갚을 수 없고, 심지어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 달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인지 처음 파산·면책신청 사건을 볼 때 '과연 진술내용이 진실일까?, 판사를 속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나쁜 채무자가 아닐까? 돈을 빌려 투기를 하거나 사치를 하지 않았을까?, 혹시 숨겨둔 재산이 없을까?'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을 살피고, 꽤 '엄격하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많은 사건을 마주하며 제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앞에 있는 채무자들은 '못 갚겠으니 배째라!'라고 말하지 않고, '살려 달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지만, 다시 살아보고 싶으니 제발 좀 살려 달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들 중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창시절부터 시작된 고된 노동과 이자의 굴레에 얽매여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정은 파탄상태에 이르러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지독한 채권추심으로 불안, 우울 증세를 달고 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채무자들은 빚진 죄인이라는 생각에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을 몹쓸 짓(?)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채무자들에게 '숨기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진술 내용에 조금이라도 허위가 없는지' 등을 무서운(!) 눈으로 캐물어 더욱 상처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일부지만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허위로 진술하며, 지인의 채무만 사전에 변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엿볼 수 있는 채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부 채무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지나치게 의심하며 개개 사건을 접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이념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따라 파산·면책제도의 운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잉금융공여가 만연하고, 소비자금융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 모녀가 빚·생활고에 힘들어하다가 집주인에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동반 자살하는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국민으로부터 파산·면책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원과 판사는 파산·면책제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해야 할까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언(法諺)이 있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수집된 각종 증거를 통해서도 유죄의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 피고인을 단순한 의심만으로 처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판사도 열 명의 범인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위 법언을 파산·면책제도 운영에 조금 참고하면 너무 과한 것일까요?

저는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판사입니다. 불편부당(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공평함)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함을 숙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무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려 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을 열고 한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 이상 세 모녀의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고

삶의 에너지와 훈훈한 공동체

고성혁
전남도 대변인

'소사 가는 길, 잠시'라는 신용목 시인의 시가 있다. 시인이 시흥에서 소사를 향해 가는 길 위의 버스에 앉아있었다. 창밖의 풍경을 쳐다보다가, 끄덕끄덕 졸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느 신호등에서 멈춰 선다. 문득 고개 들어 차창 밖을 쳐다보니, 건너 다방 유리에 시인의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앳된 처녀 하나가 그 비친 얼굴과 겹쳐 손톱을 다듬고 있다. 아, 놀랍다. 어찌 저럴 수가. 시인은 생각한다. 그렇다면, 저 처녀도 내 부스스한 얼굴을 보았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의 머리 위에는 기원의 바둑돌이 놓여 있고, 그 위엔 한 줄, 비행기가 지나간 흔적이 흰 구름으로 무심히 떠있다.

삶이란 이런 순간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삶이란 높다란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단편들일 수도 있다. 기쁨은 물론 "어, 이게 아닌 데"라는 후회의 순간도 삶의 일부이고 분노와 절망의 순간도 삶으로 쌓인다. 어떤 재화의 효용은 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나 그 한계효용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삶도 이 같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 아닐까? 소득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행복도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다. 그렇다면 우리를 관통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할까?

지금까지 살아오며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세 살 때였다. 잠자리를 잡기 위해 대나무 잠자리채를 입에 물고 논길을 달렸다. 그러다가 넘어졌고 잠자리채는 입 안 깊숙이 박혔다.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한 동네 형이 잠자리채를 잡아채 꺼냈지만 결국 반은 부러지며 식도를 타고 들어갔다. 그 이후 꼬챙이처럼 말랐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네 분들이 참기름을 식도에 흘려보내고 몸을 거꾸로 잡고 흔들기도 했다고 들었다. 우스운 일이지만 사실이다. 꿈속에 나타나신 할아버지와 동네 분들의 주선으로 목포로 나와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고, 지금도 10㎝가 넘는 흔적이 뱃속에 남아있다.

두 번째는 낚시 사고였다. 초등학교 3~4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고향의 갯바위 낚시터로 바다낚시를 갔었다. 울퉁불퉁한 바위에 자연산 굴이 말 그대로 덕지덕지 붙어있고, 바위 가장자리까지 밀물이 몰려들었다. 낚싯줄에 미끼를 물리고 낚싯대를 던지는 순간 발을 헛디뎌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당황한 나머지 허우적댈수록 몸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이윽고 바닥의 굴 껍데기에 발바닥이 닿았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 누군가 내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형이었다. 어머니가 낳았으되 함께 키우지 못한, 그래서 사촌 집에서 살고 있던 형이 먼발치서 물에 빠진 동생을 보고 뛰어든 거였다. 형은 굴 껍질에 찔려 발바닥이 피투성이인 나를 업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인연은 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 고독하게 살고 있는 형이 그립다. 그렇게 두 번째 삶의 고비를 넘겼다.

세 번째는 병원에서 겪었다. 고등학교 시절, 사촌형이 맹장수술을 해 입원해 계셨다. 병문안을 갔고, 어른들의 얘기가 지루해 옥상으로 올라가 시가지를 내려다보려 무심코 무언가를 짚었는데, 그게 고압선이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올라와 내 몸을 떼려다 그들도 감전되었다. 더 많은 이들이 올라와 한꺼번에 덤벼들어 떼어냈는데 난 얼마간 기절하고 말았다.

세 번의 죽을 고비. 모두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살아났다. 앞으로 또다시 생사기로를 간다고 해도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라 해도 홀로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삶의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주변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애착관계를 안정적으로 맺고 그들의 사랑을 통해 얻어야 한다. 아기는 몇 걸음 걷다 뒤돌아 엄마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시 멈춰 서서 엄마를 쳐다 본 후 뒤돌아 걷는 연습을 한다. 이 과정이 미흡했던 사람들은 유아기에 주저앉아 울음보를 터뜨린 좌절상태로 성장이 멈춰서 있다고 한다.

이런 무력감에 젖어 꼼짝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소설가 김형경은 편안하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을 만나 천천히 삶을 익혀나가도록 권하고 있다.

진정한 삶의 에너지는 타인을 향한 이타성에서 나온다고 한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 협력해 공동체를 만들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지구의 정복자' 저자 에드워드 윌슨의 주장도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남도가 펼치고 있는 '훈훈한 공동체'는 우리네 삶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규제 개혁 지방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당국이 규제 개혁 후속 조치에 착수했으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 지속성 유지, 지방정부를 억누르는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와 지자체의 노력 등이 요청된다.

완화 대상의 선별 문제도 중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민주당은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사회단체도 규제 철폐가 재벌과 대자본의 독식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경계한다. 공동 선(善) 추구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는 남겨 놓아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를 푸는 일이 일과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도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1만5000여 개에 달했던 규제 수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곧장 제자리로 돌아간 바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집요해 정권 말기가 되면 규제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중앙 부처가 틀어쥐고 있는 사무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관-관'(官-官) 규제의 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률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 자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적어도 40%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지방분권이 가시화되고 예산도 함께 따라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되, 지자체 당 평균 215건에 이르는 등록 규제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로까지 지칭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는 필수조건이며, 중앙-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폭행에 포커도박까지 '막가는' 교사들

교사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포커게임을 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경영고(옛 전산고) 교사 6명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1~2차례씩 식사비나 술값내기 카드놀이를 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교사들의 상습 포커는 이 학교 A교사가 교장·교감을 폭행한 데 대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학교의 상급자들을 폭행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교사들이 학교에서 도박까지 했다니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이 교사들이 금품을 걸지 않고 작년 10월 1차례만 카드놀이를 했다고 했으나 바로 다음날 A교사를 포함한 이들이 상습적으로 포커를 했음이 드러나 감사 결과를 축소 내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에 A교사가 전교조 소속이고, 이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이 같은 비위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립학교 소속인 A교사가 한 학교에서 20년 이상씩 근무하고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원들은 통상 한 학교에서 4년 근무하면 이른바 만근(滿勤)으로 전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교사는 학부모에게 학생의 자퇴원을 강요하고 "이런 아이는 사회악이다. 학교에서 졸업해 봐야 사회를 좀 먹는 아이"라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건을 키우고 말았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이나 도박 조사로 끝내지 말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 문제점을 뜯어고쳐야 한다. 또한 A교사 등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인 근무행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無等鼓

포은과 삼봉

요즘 모 방송국의 역사 드라마 '정도전'이 장안의 화제다. 이전의 퓨전사극과 달리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통사극을 표방한 것이 인기 비결이다.

지난 22일 밤 방영 분에는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이 이성계 앞에서 자신들의 의중을 글씨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왔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한 글자의 한자(漢子)로 쓴 것이다.

포은과 삼봉 모두 민심의 기본은 먹고사는 문제라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삼봉이 먼저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먹고사는 문제(입·口)에 사람(人)이 더해져야 한다며 '사(史)'를 썼다. 인재를 얻어 부패한 고려를 뒤엎고 새 나라를 세우라는 메시지였다.

이를 지켜본 포은은 민심(口)을 꿰뚫고(丨) 중심(中)을 잡는 마음(心)이 중요하다며 '충(忠)'으로 답했다. 이성계도 신하인만큼 임금에 충성하면서 개혁을 통해 부패한 고려를 뜯어 고치라는 의미였다. 그동안 동고동락 해 온 포은과 삼봉이 각자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명장면이었다.

포은과 삼봉은 1360년(공민왕 9년) 과거에 합격하면서 조정에서 처음 만났다. 24살의 포은은 3과에 장원급제했고, 삼봉은 19살로 성균시에 합격했다. 이후 둘은 막역한 친구이자 선후배 관계를 유지했다.

삼봉은 "포은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듣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날마다 듣게 됐다"며 스승처럼 따랐다. 포은은 삼봉이 실세 이인임의 눈밖에 나 나주로 귀양을 갈 때 '대의명분론'이란 상서를 올려 구명에 앞장섰다.

이성계와의 관계는 포은이 종사관으로 세차례 출전하면서 먼저 맺었고, 삼봉은 조선 개국의 큰 꿈을 안고 제 발로 찾아가면서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포은이 이성계를 도와 역성혁명을 꿈꾸는 삼봉의 야심을 알게되면서 둘은 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둘의 경쟁은 포은이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무리에게 참살당하면서 삼봉의 승리로 끝났다. 개국공신 삼봉도 6년후 이방원에게 비운의 최후를 맞았다. 포은보다 고작 1년을 더 살았다.

태종이 된 이방원은 포은에게 '문충공'이란 시호를 내렸다. 포은의 충성심을 높이 산 때문인데 역사의 아이러니다. 역사속 2인자의 운명은 늘 그랬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